

‘세계 최대 규모’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시동’

한 총리, 1단지 시운전 현장 방문
최초 순수 민간 사업...48조 투입
“선도지역 도약 긴밀한 지원 강구”
김 지사, 차등요금제 필요성 강조

신안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의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다. 이어 배후 부지인 목포신항을 시찰하고 산업계와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민간 자본 48조원이 투입, 총 26개 단지에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중 하나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9.6MW 풍력기 10기로 총 96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추게 되는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며,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인 CIP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시운전에 나선 풍력기는 지난해 3월 착공한 6기 가운데 하나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도 찾았다. 목포신항에는 해상풍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목포신항만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발전기업 등과 전남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 사용될 풍력발전기 적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용 항만 조성을 위한 철재 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며, 관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입주 위한 배후단지도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는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

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국가 재생에

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해상풍력의 메카, 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50%씩 전력을 소비하는 혁신적인 방안 설명 및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논의 중인데, 이번 기회에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 도 단위 차등화 기준이 필요하며, 저렴한 깨끗한 전기를 찾아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전력계통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산업부에 신안 3.7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는 영광·나월·신안 우이 해상풍력 등이 이어지는 후속발전사업들도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30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거꾸로 표지판’ 장기간 방치...

1면서 계속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잦은 차선 변경 등 특수성이 있어 광주경찰과 도시철도가 직통으로 소통한다”며 “지난달 생긴 사고 이후 도시철도가 현장 수습을 (지하철) 시행사에 맡겼는데, 미처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한 것 같다. 교통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관련해 질의 했지만 ‘담당부서에 확인하겠다’는 답변 돌아왔다.

이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지시했던 경찰 측은 ‘광주시의 탁상행정’을 꼬집으며 곤장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설치 요청 후 모든 권한·관리를 지자체에 맡긴다. 시가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니 몰랐던 것 같다”며 “해당 장소는 당장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인다. 바로 정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방치됐던 ‘거꾸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만에 시정조치 됐다.

영암 한우농장서 전남 첫 렘피스킨 발생

전남도, 출입통제·감염축 살처분
인근 6개 시군 일시이동중지 명령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 등 렘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 검사 결과 렘피스킨 양성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렘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확산 차단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암 발생농장은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영암군에 신고했다. 농림축

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울머어 처음 발생했다.

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도 현장조사반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출입통제와 소독을 하고, 감염축 선별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영암군과 인접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소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 등에 대해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

령했다. 지역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 폐쇄하고,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336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 현재까지 추가 의심축은 없는 상태다.

정광현 전남도 축산식품국장은 “렘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농가에서는 해충방제와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소 렘피스킨은 7개 시도 20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 강원 7, 충북·충남·경북 각 2건, 대구·전남 각 1건이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